

# 식 순

P · R · O · G · R · A · M

- 13:00~14:00 등 록
- 14:00~14:30 개 회 식  
개 회 사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축 사 유병로 대전발전연구원 원장
- 14:30~15:00 발표 1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족다양성 증가의 이중적 함의와 지원방안”
- 15:00~15:30 발표 2 김종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 저출산 요인 분석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 15:30~15:45 *Coffee Break*
- 15:45~17:30 토 론  
좌 장 김태련 아이코리아 회장  
토 론 자 고선주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문은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박윤옥 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 대표  
윤경아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가나다 순)

자유토론 및 폐회



# 차 례

## C · O · N · T · E · N · T · S

- |  |    |
|--|----|
| ▣ 가족다양성의 이중적 함의와 정책방안<br>김혜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3  |
| ▣ 충청남도 저출산 요인 분석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br>정책대안 모색<br>김종철(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 | 29 |



# 1



## 가족다양성의 이중적 함의와 정책방안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족다양성의 이중적 함의와 정책방안<sup>1)</sup>

김혜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학)

## I. 들어가는 말

사회변동과 더불어 가족구조 또한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가족은 더욱 뚜렷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가족변동은 가족위기로 이해될 만큼 다양한 해체적 증후를 목도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경제위기의 극복방안으로 도입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대량의 실직사태를 동반하면서 이제까지 가족부양자의 역할을 자임해온 아버지들의 권위가 크게 약화되고, 실직가장의 가출 등으로 인한 별거와 이혼이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계부양의 짐을 짊어진 여성가구주의 증가로 자녀와 노인에 대한 가족 돌봄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기 상황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을 둘러싼 사회불안정성의 증가는 이러한 변화 양상이 비단 위기국면에 대한 일시적 반응이기 보다는 그야말로 새로운 가족구조와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장기적인 트렌드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남녀를 불문하고 20대 청년에게 있어 결혼은 더 이상 중요한 개인과업이 아니며, 결혼과 출산 또한 순차적이며 연속적인 생애과업으로 수용되지 않음은 물론 혼인과 자녀생산에 있어 사회적인 적령기의 개념조차 점차 퇴색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곧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 평균결혼연령의 지속적인 증가와 미혼인구의 증가라는 집합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역학관계에 의해 추동되는 가족변동의 인과기제와 그 결과에 대한 정당한 분석은 간단하지 않으며, 다차원적인 가족변화의 특성을 평면적으로 논의하는 것 역시 용이하지 않다. 가족변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현재의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같은 관점의 문제로부터 가족 안팎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변인과 그 변인들의 영향력에 관한 객관적 평가, 즉 현재의 가족변화를 초래하는 개인적이고 사회구조적인 변동요인이 가족에 미치는 상호 모순적인 영향력들을 모두 고려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김두섭 외, 2005:11). 또한 가족 변동은 거시적인 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식과 이들의 일상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조로서의 가족과 개인 특성을 동시에 살펴보지 않을 경우 가족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가능하지 않다(김혜영,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기대와 사회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1) 본고는 필자가 2008년과 일련의 논문을(참고문헌 참조)재구성하고 수정한 것이다.

구조적 경향성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개인들의 가족의식과 행동의 변화는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가족변동을 촉발하는 구조적인 요인과 가족변화의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논의되는 가족의 다양성의 측면만을 살펴보고, 가족다양성에 내포된 이중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요컨대 가족변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과 역동적인 가족안팎의 모든 변화양상을 분석하기 보다는 가족의 형태적·구성적 변화를 초래한 사회구조적 요인과 가족변동의 특징적 양상으로 지적되어온 가구형태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가족변동에 관한 다층적 분석은 후속의 연구로 미루는 대신, 가족다양성의 증가에 내포되어 있는 이중적 함의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가족변동의 사회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 II. 가족변동과 가족다양성

가족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더불어 가족변동에 관한 논의는 가족연구의 출발점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의 진화를 설명하는 인류학적 접근부터, 생산력을 둘러싼 생산관계의 변화에 조응하는 가족변화를 주장한 엥겔스나 사회구조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관계 틀에서 개인들의 행위양식과 가족을 설명한 가족사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가족변동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Engels, 1987; Hareven, 1987; Anderson, 1971).

그 가운데 가족변화를 둘러싼 가장 치열한 쟁점은 산업화이후 핵가족화의 보편성을 주장한 파슨스(Parsons)와 구드(Goode)의 주장에서 비롯된 바 있다(Parsons, 1964; Goode, 1968). 소위 구조기능론자로 대별되는 이들은 가족변동의 핵심 메커니즘을 산업화로 보고, 산업사회와 기능적인 적합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현대가족의 보편적 특징을 핵가족화로 귀결 지은 바 있다. 산업사회에서의 보편적인 핵가족화론을 정립한 이래 많은 가족론자들은 이들의 주장을 논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가족이론의 발전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이같은 구조기능론적 접근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며 중산층에 편향된 이론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이 현대가족의 전형으로 인식한 성역할에 기반한 핵가족은 더 이상 보편적인 가족형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비정형 가족형태의 꾸준한 증가를 오히려 후기 산업사회의 본질로 이해한 포스트모던 가족론자들에 따르면, 현대가족은 기정사실로 수용되는 고정된 어떤 것이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제도와 맺고 있는 험거운 연관성과 관계의 휘발성으로 인해 비정형적이고 다양한 가족들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견 무질서해 보이는 다양한 현대가족의 출현은 시장논리에 팽배에 의해 감각적 유인책이 이데올로기보다 더욱 효과적인 설득기제로 작동함에 따라 가족안팎에서 채택,



육망, 육구충족 등이 새롭게 정의되는 등 가족생활의 전환적 사고를 요구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가족의 불안정성이 가족의 재구조화로의 전이과정, 즉 '근대성' 내의 불균형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탈근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Stacey, 1990; 박숙자 외, 1995, 47-48).

한편 장경섭(1995)은 1980년대 이래 한국사회에서 비전형적인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포스트모던 가족의 출현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족구성원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규범적 상황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즉 포스트모던 가족을 규범적 불확실성, 다양성으로 규정짓는다면, 현상적으로 한국의 가족은 포스트모던 형태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이해는 될 수 없다고 평가한다. 장현섭(1993) 또한 현대 한국가족은 비이념형적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족생활이 제 자리를 찾기 위한 일련의 혼란스러운 과정으로 보지만, 바로 그 이유는 무엇보다 기존의 가족생활이나 규범에 관한 일반적 합의가 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혼란은 서구의 후기 근대적 상황이나 가치관의 다양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결합되어 더욱 중층적 복잡성과 갈등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하고 있다(장현섭, 1993, 70; 문소정, 2005, 10).

이에 비해 가족형태의 다양성은 소위 핵가족의 위기에 의한 파생적 산물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즉 한국의 핵가족 가운데 완결된 핵가족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심리적 여건이 미성숙함으로써 한국가족은 불완전한 핵가족화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장경섭, 1991, 181). 한국의 가족은 여전히 직계가족의 원리가 유지되고 부부관계보다는 부모자녀관계를 중시하며, 부부의 성적 친밀성보다는 가족중심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둔 공동의 이해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남아 있음과 동시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핵가족화의 뚜렷한 원리가 확산되는 등 불안정한 경향이 혼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국가의 사회안전망 인프라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족 중심적 연결망이 개인보호의 핵심기제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변화를 가족생활의 경제적 요소는 물리적, 심리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념적으로는 핵가족화를 지향하지만, 정작 많은 가족들은 결코 완결된 핵가족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심리적 기틀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각기 서로 다른 관점에서 현대가족을 바라보지만, 대체로 가족 다양성의 증가가 바로 현대가족의 특성이라는 점에서는 합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다양성이 야기되는 원인의 규명과 향후 가족변동의 방향을 전망함에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이 조금씩 구분되고 있다.

### III. 가족변동의 사회구조적 요인

가족변동의 과정과 변동에 따른 한국가족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오늘날의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핵심기제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다만 최근 들어 빠르게 변화하는 특정한 기술적 변화에 주목하고, 이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를 지적한 논의가 적지 않다. 즉 산업화 이후 사회변동을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추동력은 정보화라는 사실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그것은 바로 정보기술적 변동이다. 따라서 한국가족변동의 구조적 맥락으로서 정보기술의 변화와 이로 인한 개인화의 경향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정보화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과 2000년 이후 가장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혜영, 2007b).

#### 1) 기술적 요인

컴퓨터와 원격통신기술의 결합인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기술영역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등 사회제반 영역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던 새로운 공간으로서 가상공간을 창출하고 있으며, 가상공간에서 구성되는 새로운 관계맺음의 방식은 실재의 개인과 사회적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통신매체의 등장과 통신기술의 보편화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동시에 확장적인 사회관계를 경험케 하는 긍정적 측면 또한 적지 않다. 예컨대 통신을 통한 의사소통은 공간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수월해져 물리적 거리와는 무관하게 친구, 친척 그리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조정문 외, 1999, 393). 그러나 동시에 개별화된 통신매체로 인해 개인화된 라이프스타일과 의사소통을 더욱 선호하게 만듦으로써 가족 및 친지, 친구 등과의 관계맺음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이다(김혜영, 2007a, 319)2).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손쉬운 만남과 유대는 또 다른 공간에서의 관계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의 반복은 곧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만남의 효용성과 기능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계맺음의 방식은 가족이나 친족체계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와 도덕과 같은 일체의 외재적 기준이 요구되지 않는 순수한 관계의 출현가능성을 높여주는 문화적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전자의사소통과 전자관계망에서 형성된 관계형성의 방식이 기존의 사회관계로 쉽게 확산됨으로써 전자공동체에서 등장한 순수관계, 즉 가깝지만 영속적이지 않으며, 깊이 사귀지만 언약이나 충성의 맹세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원초적 관계가

2) 정보화로 인한 가족변화의 다양한 측면은 줄고 “정보사회와 가족의 구조변동”(김혜영, 2007a)을 자세히 참조하라.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조정문 외, 1999, 395-396). 따라서 끈적끈적하고 몰입적이며 지속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자유롭고 가벼우면서 단기적인 인간관계가 새로운 인간관계의 유형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산업사회의 관계맺기 방식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더욱이 산업화 이후 시장에서의 경쟁과 상품성이 주요한 사회가치로 부각되면서 시장 가치의 위력은 실로 놀라울 만큼 확대되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관계 또한 다분히 물상화되고 있다. 이는 인간관계가 물질관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관계가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특수한 인간관계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Marx, 1987: 박승희, 2006, 222에서 재인용). 요컨대 시장주의의 팽배는 정의적인 교환관계에 기초한 모든 공동체적인 관계까지도 상품적 인간관계로 대체되는 장기적인 경향을 보여 줌으로써 공동체적 인간관계의 해체와 개인화를 초래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같은 개인화 추세는 공동체적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원초적 관계로 분류되는 가족과 가족 밖의 공동체적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가족은 이미 가족 밖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현재는 개인마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즉, 가족의 최소단위로 구분되어온 핵가족조차 크기는 작아지고 구조는 단순해지면서 집합으로서의 가족가치보다는 개인의 이해와 욕구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김혜영, 2007b).

## 2) 노동환경의 변화

인간의 노동형태와 시장의 변화는 기술변화에 상응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노동자의 확산과 이동·원격근무 등의 디지털 노동방식으로서의 전환은 다른 한편 표준화를 강제하는 외부적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계약은 거리와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의 통신 인프라와 결합되어 있는 지구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적절한 기술과 노동력의 재배치를 통한 협업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른바 노동과정의 지구화가 실현되고 있다(이호영·유지연, 2004, 40).

통상 신자유주의로 대별되는 강도 높은 글로벌 경쟁은 자본의 무한확장 및 이동과 맞물려 좁은 구직기회, 구조조정, 실업 등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직장의 시대는 가고, 누구나 취업과 실업의 과정을 반복 경험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는 가족의 경제적 여건을 악화시킴으로써 다양한 가족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및 중장년층 명예퇴직의 증가로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는<sup>3)</sup> 우리의 현실은 청년세대의 가족구성을 지연시키

3) 2007년 10월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15세-29세)의 고용률은 2004년 45.2%(9월 기준)에서 매년 하락하여 올해는 41.6%를 기록하였다. 청년층 10명 가운데 4명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취업난으로 인해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백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48.7%이던 청년층의 경제

는 주요한 환경으로 작용하게 되고, 나아가 이들의 가족의식이나 생활방식에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실제로, 경제 위기나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위기나 경제형편의 변화는 남녀관계를 위시하여 가족관계는 물론 가족의 구성과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성별 및 가족관계의 변화는 가족구성원의 의사소통방식이나 응집력 등의 가족 내적 차이와 그들 가족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같은 계층적 차이에 따라 각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현상은 경제적 어려움은 쉽게 가족의 응집력을 떨어트리거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Larson, 1984; Voydanoff, 1990).

특히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성은 결혼진입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여기에 더해 그동안 대도시에서의 주택비용상승과 결혼비용의 증가<sup>4)</sup>는 결혼진입은 물론 가족재생산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김혜영, 2007b, 36-37). 이런 점에서 현대가족의 합리성은 자녀의 수와 소득의 상관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은 개별 가정의 소득과 소득구성의 방식, 나아가 개별가정의 소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노동시장 환경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정에 소요되는 물리적, 심리적 비용과 깊게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불안정성의 심화와 자녀수의 지속적인 감소세와는 달리 자녀교육비용의 꾸준한 증가와 주택구입 및 유지비용과 같은 가족재생산비용의 증가는 젊은 세대의 가족형성과 유지에 커다란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sup>5)</sup>.

### 3) 인구구조의 불균형

한국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적극적인 산아제한을 통한 인구억제정책이 유효했던 사회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속한 감소세로 인구정책의 질적 전환이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1995년에는 1.65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2000년 1.47명, 2002년에는 1.17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다시 2005년에는 1.08로 낮아진 후 약간의 회복세로 돌아서 2006년 1.13, 2007년도의 1.26을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07).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1960년대

---

활동참가율은 2007년 현재 44.8%로 낮아졌으며, 집이나 학원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은 53만 6000명에 달하고 있다(중앙일보, 2007).

- 4) 한 조사에 따르면, 2005년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결혼을 위해 지출한 총 결혼 비용은 평균 12,944만원이며, 이 가운데 신랑 측은 9,609만원(74.2%), 신부 측은 3,335만원(25.8%)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결혼 시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마련비용으로 총결혼비용 12,944만원 가운데 8,571만원(66.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2007b, 38).
- 5)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연구에 의하면 연간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14조 6천억으로 세계 최고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학생들의 사교육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예컨대 1980년도에는 전국 중학교 학생의 20.3%가 사교육을 받은 반면에 1990년에는 31.0%, 1999년과 2000년도에는 50% 이상, 그리고 최근 2003년도 조사에서는 무려 75.3%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호, 2005, 123). 또한 이에 대해 조사대상가구의 77.2%가 자녀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스럽다고 응답하고 있다(통계청, 2004: 김혜영, 2007c, 34에서 재인용).

약 5.0명의 수준에서 2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약 2.7명의 수준으로 점차 낮아졌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70년대 이후 완만한 하락세에서 2000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급락세를 보여줌으로써 최저출산국가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만혼이나 만산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거나 적어도 안정적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최저출산국의 대열에 합류한 이래 전체 인구의 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향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30명으로 다소 증가할 것이지만,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가임여성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2005a). 저출산의 사회적 파장은 무엇보다 생산인구의 비중을 급속히 감소시킴으로써 노동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05년 71.8%로 일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사회보다 높지만, 2050년에는 오히려 선진국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5 b).

우리가 처한 다른 고민은 바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고령사회가 목전에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균수명은 1960년 52.4세, 1970년 63.2세, 1980년 65.8세, 1990년 71.6세, 2000년 75.9세, 2005년 77.9세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향후 2010년에는 평균수명이 79.1세, 2020년 81.0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10.3%로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한명이 노인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사회는 이미 2000년도에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노인인구에 해당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바 있다(통계청, 2008).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에 도달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2005a).

이같은 고령화와 저출산은 가족의 구성방식과 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컨대 현 수준에서 평균결혼연령에 따라 결혼하고 평균기대수명으로 산다고 가정할 경우, 초혼의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거의 50년에 달하지만 자녀출산과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소자녀 추세로 더욱 단축되고 있다. 따라서 부부는 상호 친밀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질 것이고, 만족스러운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는 관계로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결혼과 이혼 및 재혼은 전 생애 한번 경험하는 생애사적 사건이기보다 개인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선택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증가된 이혼, 특히 노인인구의 꾸준한 이혼율 증가는 이러한 경향을 어느 정도 반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구성변화는 곧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정 내 성별구조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특히 금세기는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로 공공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활동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가족의 노약자 돌봄과 보호기능은 크게 약화 또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즉,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에서 2인 생계부양자로의 전환은 곧 돌봄의 사회화나 성별공유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한, 가족돌봄 기능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 IV. 가족다양성의 이중적 함의

##### 1.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 증가와 개인화<sup>6)</sup>

가족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가구형태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가족의 세대별 가구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가구구성원은 1975년 평균 5.0명으로 부터 80년 4.1명, 90년 3.7명, 2000년 3.1명, 2005년 2.9명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세대구성에 있어서는 단독가구의 증가와 직계가족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표 1참조>). 즉, 직계가족을 의미하는 2,3세대 가구의 감소와 1인 가구의 비약적 증가는 한국가족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양상인 것이다. 무엇보다 3세대 가구는 지난 25년 동안 절반이하로 줄어들었으며, 2세대 가구 역시 68.5%에서 55.4%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1인가구는 지난 25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해 왔는데, 1인가구의 증가는 특히 제도적 결혼관계에 진입하지 않는 미혼과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단독가구, 노인 1인가구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30세 이상의 미혼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 전체 미혼인구 가운데 5.4%에서 불과하던 것이 2000년 13%, 2005년 20%로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단독 가구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김혜영, 2008). 이러한 변화를 아래의 <표 1>과 같이 다시 재분류해보면, 지난 30년간 한국가족은 구조적으로는 더욱 단순화되는 한편, 형태적으로는 비정형 가족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단위: %)

가족구조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1세대	부부가족	4.8	6.3	7.1	8.3	10.8	<b>12.3</b>	<b>14.2</b>
	기타	1.9	2.3	2.5	2.4	1.8	1.9	2.0
2세대	부부+자녀	51.7	53.0	52.8	51.9	50.4	<b>48.2</b>	<b>42.2</b>

6)이 절은 필자의 원고(“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47(2), 2008) 가운데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7)가구 수의 감소는 일차적으로 소 자녀에 기인하는데, 여자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갖게 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1975년 4.5명에서 2002년 1.19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사회는 지난 약 40년 동안 출산율이 74% 가량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족구조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한부모 가구	편부가구	11.2	9.3	8.9	7.8	1.3	1.5	1.8	
	편모가구					6.1	6.3	6.8	
	부부+양친		0.1	0.2	0.2	0.2	0.2	0.2	0.1
	부부+편부모		0.4	0.4	0.5	0.6	0.7	0.8	0.8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2.1	2.3	2.3	1.7	1.0	0.6	0.5
	기타	조부모+손자 녀	3.4	3.2	2.3	4.0	0.3	0.3	0.4
		기타					3.3	2.8	2.8
3세대	부부+자녀+양친		1.9	1.9	1.9	1.7	1.3	1.1	0.9
	부부+자녀+편부모		8.5	7.9	7.2	6.7	5.5	4.5	3.6
	기타		8.8	6.7	5.3	3.8	3.0	2.6	2.4
4세대 이상		0.9	0.5	0.4	0.3	0.2	0.2	0.1	
1인가구		4.2	4.8	6.9	9.0	12.7	15.5	20.0	
비혈연가구		-	1.5	1.7	1.5	1.4	1.1	1.4	
<b>비정형가족 비율 *</b>		<b>18.8</b>	<b>18.8</b>	<b>19.7</b>	<b>22.5</b>	<b>21.4</b>	<b>24.7</b>	<b>30.4</b>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최희경 외(2005):248의 표를 보완한 것임.

\*\*비정형가구 비율=한부모가구+조부모와 손자녀가구+1인가구+비혈연가구

뿐만 아니라 부부 혹은 부부와 미성년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생활의 측면에서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예컨대 부부가족이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남성 연상혼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음에 비해 점차 동갑이거나 여성 연상혼의 비중이 증가해 전체 결혼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구소득구성방식에 있어서도 부부가 함께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맞벌이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가 하면, 부부의 동일 국적이나 민족적 동질성이 당연시될 수 없을 정도로 국제결혼의 건수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결혼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1984년에는 평균결혼연령이 여성 24.5세, 남성 27.3세였으나 2007년에는 여성 28.1세, 남성 31.1세로 증가하였다. 이는 성인기의 주요과업으로 인식되어온 혼인이라는 생애사건이 20대에서 중반에서 점차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센서스에 기초한 통계자료를 통해 이혼이나 사별의 추이를 살펴보면, 사별은 1990년 이후 안정화되지만 이혼상태에 있는 남녀는 모두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인구가운데 이혼자의 비율은 아직 3% 미만이지만, 90년대 중반이후 이혼의 가파른 증가세와 남성보다 여성이혼자의 비율이 다소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혼자의 평균연령도 꾸준히 상승해 2005년을 기준하여 여성 38.6세 남성은 41.8세이며, 재혼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1987년에는 여성 34.4세, 남성 39.3세였던 것이 2005년에는 여성

39.6세, 남성 44.1세로 나타나고 있어 바야흐로 결혼의 적령기가 특정연령대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던 사회적 관습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민현주 외, 2008: 11-12).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가족다양성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논쟁 역시 없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가족은 규모와 범주가 축소되고 가족구성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일부계층에서는 여전히 개인보다는 집단으로서 가족을 강조하는가 하면 부부보다는 자녀관계의 비중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백진아, 2007). 또한 형태적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가구구성은 오히려 지극히 단순화되고 가족범주 역시 크게 축소되고 있어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가족다양성이 감소된다는 주장 또한 없지 않다(함인희, 2008)<sup>8)</sup>. 그러나 적어도 현대의 가족은 동거의 범위가 제한적이긴 하나 결혼선택의 여부로부터 언제,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구성과 유지에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이념형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다양성을 추동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개인화 경향이라는 점이다. 특히 7-80년대만 하더라도 핵가족단위의 가족이 강조되고 개인보다는 단위로서의 가족이 우선되는 경향이 강했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가족 특유의 응집성이 무조건적으로 강조되거나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폭력가족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나 방임아동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 용인되고, 불행한 결혼관계보다는 그러한 관계를 해체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는 이미 문화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개인보다는 가족이라는 집단의 영속과 번영, 가족에 대한 개인의 몰입과 헌신을 강조해온 과거와 달리 자유롭고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인간관계가 우리의 일상과 가족생활에 침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기성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기꺼이 가족의 공간과 시간이 상호 분리되고 개인화되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에서 가족은 이미 가족 밖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으며, 현재는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족의 개인화는 제도로서 가족이 갖는 개인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가족의 개인보호기능의 종언을 의미한다. 요컨대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각종 상업적 매체에 의해 개인은 더욱 쉽게 표준화되어가는 만큼 현대인들은 사회제도에 얽매이고 의존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화가 갖는 사회적 결과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김영호, 1996; 박승희, 2006).

8) 요컨대 90년대 이후 한국가족은 가족 삶의 방식은 다양해졌지만, 가족구성의 원리와 동거의 단위는 명확하게 특정의 관계로 압축되고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개인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2. 2인 생계부양자 가족의 증가와 가족 양극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따라 상품의 생산과 판매는 물론 자본과 인력, 심지어 취향과 기호의 이동이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는 경쟁의 세계화는 이미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 되고 있다. 세계시장주의의 확대로 산업과 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압력은 더욱 강화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곧 고용불안과 일자리 창출의 양극화를 노정시키고 있다. 특히, 내구소비재의 발달과 기호품의 다양화로 인한 가족소비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가족의 생활격차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주거비용을 증가시키며, 소자녀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가족재생산비용은 급속히 상승해 왔음이 그것이다(양정호, 2004; 김혜영 2007b).

이러한 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 가족들이 쉽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생계소득자를 최대화하거나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정작 가족의 가구재생산비용은 일정수준 이하로 낮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임금취득이 가능한 성인을 중심으로, 핵가족 구조상 주로 남편과 아내가 주축이 되어 가구생계소득자를 최대화하는 전략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현대사회에서 결혼과 일을 양립하거나 결혼제도 이외의 삶을 선택하는 여성의 욕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점차 2인 생계부양자 가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는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동기로 작동된다. 특히,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학력이나 기술, 자본을 소지하지 못한 저소득층가구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 계층의 기혼여성들에게 있어 노동시장 참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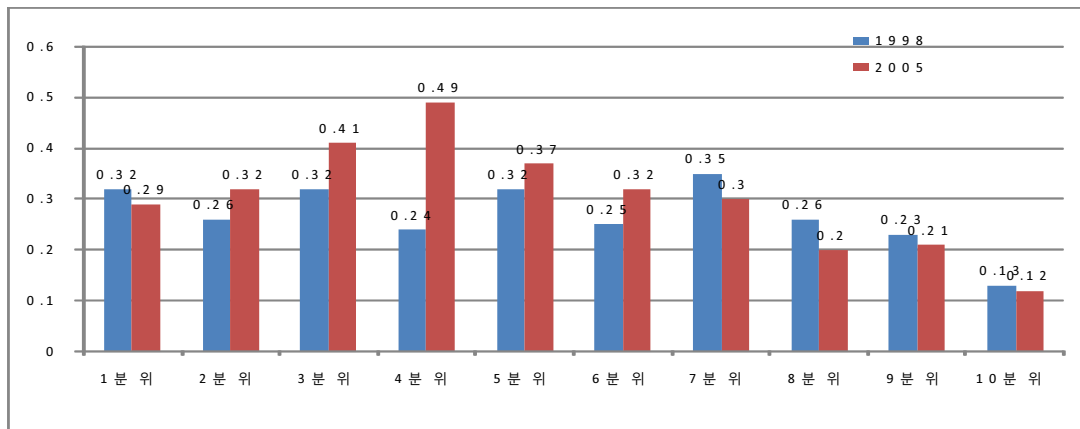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불리한 인적자본으로 기혼여성들은 비정형, 저임금직종에 집중되어 있어 가족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마련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재편이 불가피해지면서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시장진입은 제한적이다. 실제로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취업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1985년 41.9%에서 2006년 50.3%로 확대되었고 지난 10년간 여성임금근로자는 30.2%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증가분의 78%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위기극복 방안으로 제시된 노동시장의 유연화전략은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0년 35.4%에 불과했던 임시 일용근로자의 여성비율이 2005년에는 54.4%로 증가로 하여 전체 여성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61.9%에 달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이처럼 여성노동은 특정의 부문과 지위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

동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임금구조 또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가족의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9년에 비해 2004년의 경우 일인생계부양자는 79.3%에서 50.6%로 낮아지고 2인 생계부양자 형태의 가구는 20.7%에서 49.4%로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일인생계부양가구에 비해 2인생계부양가구의 학력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이들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1인 생계부양자가구보다 낮다는 것이다(윤홍식 외, 2006: 11-13)9).

최근 기혼여성의 취업활동이 과연 가구불평등을 해소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보다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김영미, 신광영, 2008). 1998년과 2005년의 자료분석 결과, 모든 소득분위에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은 증가하나 남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일반적인 경향성이 나타나고, 특히 1998년과 2005년 모두 남편소득이 중하위계층인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중상위계층여성의 경제활동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다시 여성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비임금 근로자,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임금근로자로 나누어보면, 중하위소득계층 여성경제활동 증가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종사상의 지위가 임시, 일용직, 혹은 근로시간 형태가 시간제 고용으로 나타났다<sup>10)</sup>(김영미, 신광영, 2008:91).

<그림 1> 남편소득분위별 경제활동 기혼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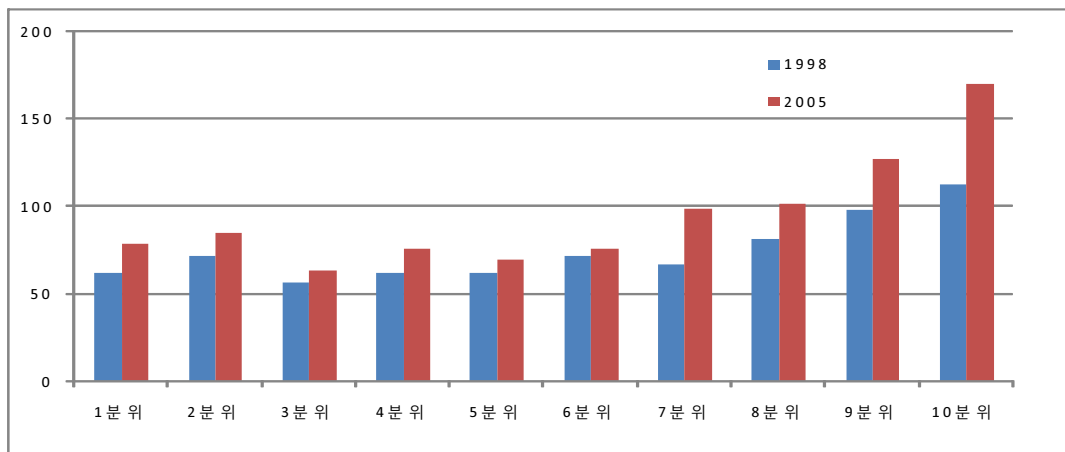
자료: 김영미, 신광영(2008):92에서 재인용

9) 또한 2인생계부양가구의 경우, 배우자 소득의준도는 1인 생계부양가구보다는 낮지만 2인 생계부양가구의 배우자 소득의준비율은 1999년 56.3%에서 2004년 63.1%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가구에 비해 소득기여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10) 특히 남편소득이 7분위 이상인 집단에서는 비정규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든 반면, 중하위소득집단인 2분위에서 6분위에서는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함으로써 하위소득집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질적 내용은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들의 연구결과는 여성일자리의 다양성 증가라는 노동시장 변화가 선택적 결혼이 강한 한국 상황으로 인해 남편과 부인의 소득연관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계층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2>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98년과 2005년 사이 남편소득분위별 부인 소득의 중앙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2000년 기준 실질임금으로 변환된 부인소득을 남편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6분위 이하인 중하위층 부인의 소득증가분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반면 7분위 이상인 중하위층 부인의 소득 변화는 오히려 크게 나타나 부인의 경제활동이 가족소득의 분포를 균등하게 만드는 효과는 오히려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김영미, 신광영, 2008:94).

<그림 2> 남편소득분위별 부인들의 소득 중위값 변화 (단위: 만원)



자료: 김영미, 신광영(2008):94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취업효과는 가족의 계층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즉 상위소득계층에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은 여성취업으로 가족의 생활기회는 물론 여성개인의 권리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하위소득계층의 여성취업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직업경력지속이나 인적자본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족안팎의 조건으로 인해 가구소득격차의 개선은 물론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자신들이 부담해온 돌봄 노동을 사회화할 수 있는 수단조차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전형적인 이중부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는 곧 이들이 경험하는 노동의 현실과 이해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남성과 여성, 기혼과 미혼이라는 조건에 의한 다양한 성차별의 문제부터 기혼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임신과 출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분담기제는 물론 일가족양립기반이 크게 미흡한

현실에서 기혼여성들은 가구 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물론 이를 사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가처분 소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오롯이 돌봄노동을 부담함은 물론 저임의 장시간 노동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중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찾기에 고심하지만, 정작 이들의 취업활동으로 이들 가족이 당면한 기회격차 역시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 3. 다양한 주변부 가족의 증가

계층적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가족의 형태나 생활방식에서 있어 커다란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계층적 질서에 따라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족현실은 상당히 다른 함의를 가지게 된다. 즉 현대가족의 특징으로 묘사되는 가족다양성 역시 특정의 계층에서는 자의적인 선택이지만, 자신의 선택이 구조화되어 있는 계층에서는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적 결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다양한 가족형태로 분류되는 몇몇 가족의 삶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가족다양성이 갖는 이중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 1) 이혼한부모가구와 여성빈곤

현대사회에서 결혼과 이혼은 개인 선택에 따라 좌우되지만, 이혼을 선택한 여성의 삶 또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실제로 이혼의 증가는 남성 중심적인 노동시장과 성 분업에 근간을 둔 근대가족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지만, 여전히 견고한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로 인해 결혼관계의 자유로운 해체와 구성이 반드시 성구분적인 근대가족의 대안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족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20년간 남성 가구주비율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가구주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는 1980년 1,169천명에서 2008년 3,689천명으로 약 3.2배 증가했으며, 비율로는 1980년 14.7%에서 2005년 22%로 증가해 왔다(통계청, 2008). 이러한 여성가구주의 증가는 이혼과 미혼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특히 90년대 들어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는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표 2> 여성가구주 발생현황 (단위: %)

연 도	여성가구주비율	발생사유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1980년	14.7	22.3	58.1	3.9	15.7
1990년	15.7	17.7	56.3	5.6	20.4
2000년	18.5	16.6	50.5	11.6	21.4
2005년	21.9	17.9	44.4	14.4	23.2

자 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2007 여성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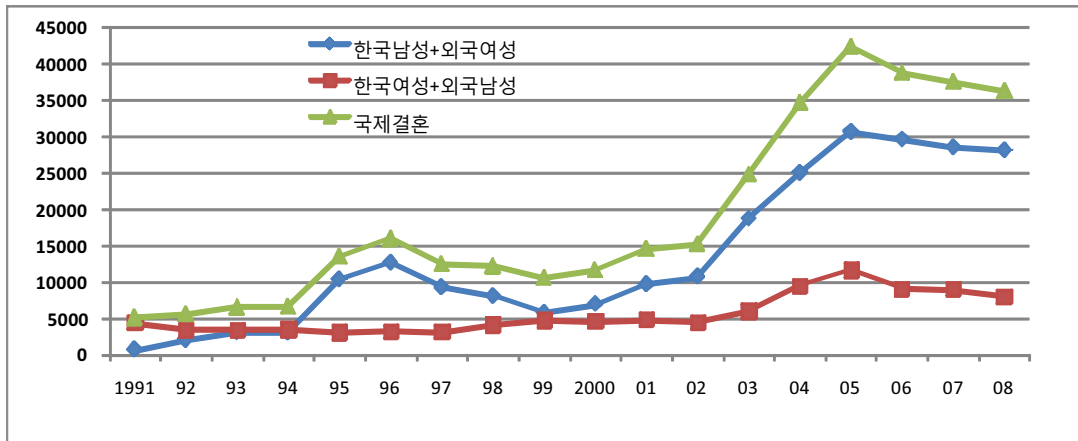
그러나 여성가구주 가구로의 전환은 곧 여성빈곤의 주요한 통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존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남성가구주 가족의 3배에 달하고(석재은, 2004; 한국여성개발원, 2003), 우리나라 여성가구주 가족의 거의 절반이 만성적 빈곤 상태이며(금재호, 2001), 여성가구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 중 여성자활대상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남식, 신은주, 성정현, 2002). 또한 최근 2006-2007년의 복지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남성가구주의 가구가 저소득가구원으로 분류된 비율은 2006년 19.3%, 2007년 19.9%에 비해 저소득가구원으로 분류된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53.3%, 2007년 55.9%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가구원으로 분류된 남성가구주의 가구의 약 3배 가까운 것이다(안상수, 민현주, 2008).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이혼 후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소득의 감소폭이 현저히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현숙과 김득성의 연구(2000)에서는 이혼여성의 62%가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으며, 해체가족의 유형에 따른 경제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도(김승권 외, 2001), 여성한부모 가족의 약 71%가 해체 후 경제생활이 매우 혹은 약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1998년부터 2003까지 총 5년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자가족의 총소득을 비교한 김미숙 외(2005)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소득감소 폭이 훨씬 크고(김미숙 외, 2005), 이혼을 전후로 한 이혼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변화에서도 이혼 후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변화순 외, 2006). 이로써 이혼이 곧 계층적 현상, 즉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서 이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김혜영 외 2008) 이혼이 진정한 의미에서 또 다른 건강한 삶의 대안일 수 있는 계층과 기성의 가족관계로부터의 해방되었으나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여성들로 이원화됨을 알 수 있다.

## 2) 주변부적 가족구성과 다문화가족

2000년 이후 다문화가족은 급속하게 증가해 왔다. 이 가운데서도 한국인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크게 증가하여,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2001년 10,006명에서 2006년 30,208명으로 불과 5년 이내에 3배가량 급증해 왔다. 사실,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1% 수준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결혼방식 역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일반적인 국제결혼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림 3> 국제결혼 증가 추이(단위: 혼인 건수)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9

200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국제결혼은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세계경제의 재편이 초래하는 계층의 양극화와 농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주변부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세계경제를 양극화 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의 중심부와 주변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결혼시장의 지위가 공고하지 못한 주변화된 한국남성, 즉 도시 중하류층과 농촌의 남성들은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여 가족재생산을 도모하는 이른바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가족 역시 결혼이 용이하지 않은 농촌총각이나 도시 하류계층의 남성들이 중개업소를 통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결혼의 준비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특정의 계층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즉 국제결혼은 저소득층 혹은 중간계층이지만 한국여성들과의 초혼이 가능하지 않는 일부의 초·재혼 남성들이 내국인과의 결혼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후에 선택하는 결혼방식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미 국제 결혼한 이들 가족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2005년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의 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이며(보건복지부, 2005), 또한 전남과 광주 인근지역의 국제결혼가족의 경우 역시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48.9%, 150만원 이하의 가구를 모두 합하면 전체 다문화 가족의 80%가 차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김오남, 2006). 또한 2004년의 경우에는 농어촌 혼인의 27.7%, 2005년 35.9%, 2006년에는 농어촌 남성 결혼의 41%가 국제결혼일 만큼 농촌총각이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양순미, 2006:156).

더욱이 이들의 결혼은 사설 중개업자나 종교단체, 친구나 친척의 소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맞선부터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극히 짧아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

재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결혼이 성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를 통한 경우 대개 결혼 자체가 금전적 거래의 형식을 내포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결혼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질적인 문화, 민족의 차이에 더해 이주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이들의 결혼에 대한 회구와는 달리 이들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즉 결혼에 대한 높은 회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불안정성으로 결혼 시기를 늦췄거나 여전히 주변부적 위치에 속한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지만, 국제결혼이 갖는 문화적 이질성과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모순적 구조로 인해 이들의 결혼 및 가족관계는 대단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래의 <표 4>는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불안정성을 가늠케 해준다. 즉 국제결혼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이혼율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표 3> 국제결혼의 이혼자 수 추이(단위: 명)

	2002 <sup>1)</sup>	2003	2004 <sup>2)</sup>	2005	2006	2007	2008	2009
내국인 총이혼	145,324	167,096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외국인 총이혼	1,866 (1.3)	2,164 (1.3)	3,300 (2.4)	4,171 (3.3)	6,136 (4.9)	8,671 (7.0)	11,255 (9.7)	11,692 (9.4)
외국인 아내와 이혼	401 (0.3)	583 (0.3)	1,567 (1.1)	2,382 (1.9)	3,933 (3.2)	5,707 (4.6)	7,962 (6.8)	8,300 (6.7)
외국인 남편과 이혼	1,465 (1.0)	1,581 (0.9)	1,733 (1.2)	1,789 (1.4)	2,203 (1.8)	2,964 (2.4)	3,293 (2.8)	3,392 (2.7)

주: ( )은 내국인 총 이혼건수에 대한 외국인 이혼건수의 비율(%)

자료: 1) 2002-2003년, 민현주, 안상수(2008): 65에서 재인용

2) 2004-2009년, 통계청(2010), 「2010 인구동향조사: 이혼통계」

### 3) 1인 가구

비정형 가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인 가구이며, 1인 가구의 대표적인 가구는 단연 노인단독가구이다.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1인 가구는 1980년 총가구(일반가구)의 4.8%에 불과했지만, 90년 9.0%, 2000년 15.5%, 2005년 20.0%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5년의 경우에는 2000년과 비교하여 42.5%나 증가하였다<sup>12)</sup>. 그 가운데 여성 1인가구는 총 1,753천 가구로 약 55.3%를 차지하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0.8%(978천 가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0대 21.4%(679천 가구), 30대 19.9%(629천 가구), 40대 15.0%(474천 가구)의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sup>13)</sup>(김혜영 외, 2007).

11) 예를 들면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건수는 2003년 약 45.4%로 증가하였지만, 2004년도에는 176.3%, 2005년도는 51.7%, 2006년에는 64.1%, 2007년 44.5%로 증가하고 있다(민현주 외, 2008: 65).

12) 1인의 가구 증가추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 54.5%. 1995년 60.8%. 2000년 35.4%. 2005년 42.5%로, 2000년에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13)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여성 아동 고령자 활동제약자 혼인연령 1인 가구 부분' 표본 집계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 10명 가운데 6명(61.8%)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며, 앞으로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어 노인부부가족이나 노인단독가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통계청, 2008), 나아가 노인만의 가구구성이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과도기적 현상만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노인가구의 증가는 곧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와 연동된 것으로, 적어도 과거와 같은 부모부양방식, 즉 부모나 자녀세대 모두에게 있어 동거를 통한 일상적 봉양은 기대할 수 없음을 의한다. 특히 여성노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아래의 <표 4>에서 보듯이 전체독거노인의 80%내외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곧 여성노인단독가구의 증가임을 알 수 있다.

<표 4> 연령별 독거노인가구의 여성노인비율 (단위: %)

연도	전체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1995년	85.2	82.4	86.7	86.5	85.6	85.5	85.4
2000년	83.4	77.1	83.9	86.6	86.4	84.3	84.3
2005년	80.6	71.1	78.8	83.9	86.1	85.1	82.8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2007 여성통계연보」: 77

그러나 한국사회의 성차별적 노동시장상황에서 이들 여성노인인구들이 노동시장의 참여와 기여도에 준해 설계된 사회보장시스템으로 그들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기반약화는 부모세대의 부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녀돌봄의 기능 또한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이들의 자녀가 그들 부모세대를 부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일례로 08년 11월 발표된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 생활비 제공자는 자녀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노후생계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같이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43.6%로 '가족'(40.7%)이라는 응답을 앞지르고 있다(통계청, 2008). 따라서 거세어진 시장경쟁 속에서 이들은 누가 어떻게 보살피며, 더욱 길어진 이들 노년기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오늘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V.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가족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지만, 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가족변화는 가족위기논쟁을 불러일으킬 급속한 것이었다. 실제로 최근 한국가족은 단일한 규범만으로는 가족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저출산, 혼인율감소, 이혼율 증가와 같은 가족위기 지표와 더불어 성·세대·계층적으로인 분화양상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이제까지 행위규범의 원형으로 인식되어온 가족주의의 현저한 약화와 평등한 개인관계에 기초한 개인권 강화라는 문화변동의 맥락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권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가족변화를 단순히 개인권의 확장이나 사적 영역의 자율성 확대로만 이해할 경우, 여성이나 노인, 주변부 집단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위험 또한 적지 않다. 요컨대,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현대 가족의 특성은 사실상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의 논리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오히려 기존 노동시장에서 활용해온 차별 기제를 더욱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취약계층의 주변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구조의 개인화에 따른 가족안정성의 약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결과는 젠더와 세대, 계층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결혼 및 가족관계의 해체로 인한 여성한부모와 여성가구주 집단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는 결혼관계의 해소가 여성과 아동의 빈곤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불행한 결혼관계를 탈피한 여성들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으로 이들의 선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이혼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김혜영 2008).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노동시장 참여는 남녀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글로벌 경쟁의 장으로 변화한 노동환경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여 누구나 자신의 상품성을 극대화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은 개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획의 장으로 변화한 가족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현대인들은 사랑을 위해 결혼하고, 사랑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백, 백-계륜샤임, 1990).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보편적인 가족지원정책의 확립은 대단히 중요하다. 무한경쟁에 대한 제어장치의 일환으로 일가정양립의 지원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자녀양육지원방안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남녀를 막론하여 대다수 개인들은 노동시장에 압도되어 가족의 구성과 유지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가족 돌봄 노동에 긴박된 여성들은 양질의 인적자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족주기와 관련하여 노동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거나 가족과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용정책과 함께 여성의 경력추구가 선택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돌봄 노동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일과 가정에서 느끼는 갈등은 출산이나 초기 양육과 같은 자연적인 재생산 활동 자체에 기인하기 보다는 양육과 노인보호, 가족 복

지와 같은 재생산활동을 그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 하는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김혜영, 2005; 2008).

특히 제한된 재화와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둘러싸인 우리사회에서는 포괄적인 가족지원체계의 구비를 위해 무엇보다 가족의 삶을 지지하고 배려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보되어야 한다. 저소득계층을 위시한 주변부 가족으로부터 점차 맞벌이 가구나 유자녀가족 일반을 포괄하는 보편적 가족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재원마련과 우선적 분배가 필요한데, 이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행히 우리사회는 근자에 들어 일련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경제위기가 가장 먼저 가족의 삶을 왜곡하고 파괴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성장일변도의 사회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보편적인 가족지원정책이 중요함은 쉽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편적인 가족지원정책에는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작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더 이상 부모의 선택이나 가구형태에 의해 배제되고 차별받는 아동은 있을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강력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부모의 배경이나 가족형태에 따라 아동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기초적인 부양의 책임을 사회가 자임하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시화된다면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족과 사회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미혼한부모가족이나 이혼이나 사별 후 홀로 자녀양육을 떠맡은 남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이들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인 동시에 한부모의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종의 사회투자 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들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곧 임신 및 출산과 자녀양육이라는 개인 과업을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믿음을 가시화하는 제일의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향후 이러한 가족지원정책의 구축은 비단 여성정책적 함의만이 아니라 가족내 아동과 노인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과감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미숙 외(2005).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지원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1). 「최근 가족해체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미·신광영(2008).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 「경제와 사회」 통권 77호:79-106.
- 김오남(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김혜영 외(2005).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시아여성연구』. 44집 1호:5-51.
- 김혜영(2007). "정보사회와 가족의 구조변동". 「사회변동과 여성주체의 도전」. 굿인포메이션.
- 김혜영 외(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외(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가족과 문화」. 20집 2호:37-64.
- 김혜영(2008),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47집 2호.
- 김혜영(2008),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한국사회 9집 2호
- 문현숙·김득성(2002). “이혼후 적응을 위한 장기교육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4(6):197-211.
- 박승희(2006). “가족다양성론에 대한 성찰적 검토”. 「경제와 사회」 통권 70호:215-236.
- 박정숙·박옥임·김진희(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백진아(2007). “한국기혼여성의 가족경험”. 『담론 201』 10(3). 241-269.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양순미(2006). “농촌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농촌사회」 16(2): 151-179.
- 윤홍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5-27.
- 윤홍식 외(2006). 「정보화로 인한 미래 가족의 경제적 기능변화에 대한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안상수·민현주·황정미(2008). “지표를 통해서본 한국여성 삶의 변화”. 「한국여성 삶의 변화와 미래 아젠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정호(2004).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양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의 위계적 선형모형분석”. 제 5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 임인숙·안병철(2000). “경제위기가 가족해체 고려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2집 2호:1-23
- 정진성(2001). “경제위기와 가족생활”. 「한국인구학」 24(1):91-121.
- 최희경. 이인숙(2005). “비정형가족의 특성과 가족복지에의 함의”. 「한국가족복지학」 15호:

245-282.

- 함인희. 2008. "다양한 가족제도와 미완의 양성평등". 『한국인의 삶과 생활변화』. 한국사회학회.
- 앤쏘니 기든스(1992).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배은경. 황정미 역). 새물결. 1996.
- 백 & 백-게른샤임(1990). 『사랑은 지독한 혼란』 (강수영. 권기돈. 배은경 역). 새물결 1999.
- 통계청(2005). 「가계조사」
- 통계청(2008). '2008년 보건·가족부문 사회조사' 결과
- 통계청(2008). 『2008 고령자 통계』 .
- 한국여성개발원(2003). 「여성빈곤퇴치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2009년 여성통계연보」
- Bourdieu. Pierre(1977). *Reproduction*. Beverly Hills:sage Publication.
- Espring-Anderson. Gosta(2007). "Sociological Explanation of Changing Income Distribu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50. No.3. :639-658.
- Gray. A. (2000). "Making Work Pay-Devising the Best Strategy for Lone Parents in Britain". *Journal of Social Policy*. V. 30. N. 2.
- Larson. Jeffrey H.(1984). "The Effect of Husband's Unemployment on Martial and Family Relations in Blue-collar Families". *Family Relations* 33.
- Meyer. M. H.(2000). *Care Work: Gender. Labor. and the Welfare State*. New York: Routledge.
- Molyneux. M. & Shahra. R. (2002). *Gender Justice. Development. and Rights*. Oxford Studies in Democratizati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Orloff. A.(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 Voydanoff. Patricia(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lation: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 요약문

정보기술의 발달과 기술변동에 의해 추동되는 노동환경의 변화, 인구학적 위기와 같은 구조적 요인은 한국가족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특징적인 변화로는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을 꼽을 수 있는데, 예컨대 핵가족 형태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부부가구와 1인 가구 등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족구성 역시 매우 다양해서, 핵가족이라 할지라도 여성연상혼,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글로벌 가족 주말부부, 맞벌이 가구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변동을 단순히 개인선택권의 확장으로만 이해할 경우, 주변화된 가족들의 현실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가족다양성 증가는 결혼 및 가족구성에서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취향이 중요해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적 양극화로 가족형태와 생활방식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특정 계층 성원의 경우에는 그들 선택 과정 자체가 이미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한경쟁적 노동시장에 압도된 개인들이 스스로 가족내 다양한 역할을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다양한 일가족양립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성장일변도의 사회에서 가족의 선택과 삶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전환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가족변화가 갖는 이중적 특징에 주목하여 한부모 가족이나 노인, 다문화가족 등 주변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가족지원정책에는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작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더 이상 부모의 선택이나 가구형태에 따라 배제되고 차별받는 아동은 있을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자녀양육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 충청남도 저출산 요인 분석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김 종 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충청남도 저출산 요인 분석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김종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1. 충남의 출산율 현황

-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00년 1.68명(전국 1.47명)에서 '05년 1.26명(전국 1.08명)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06년 1.35명, 2007년 1.50명으로 상승하다가 2008년 1.44명으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합계 출산율이 높은 시군은 2006년도에는 계룡시(1.52), 청양군(1.46), 당진군(1.43), 서산시(1.42), 천안시(1.37)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에는 서산시(1.74), 아산시(1.62), 당진군(1.60), 계룡시(1.60), 청양군(1.56)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도에는 아산시(1.65), 서산시(1.60), 청양군(1.60) 등으로 나타났음
- 합계 출산율이 낮은 시군은 2006년도에는 공주시(1.21), 서천군(1.23), 예산군(1.24), 홍성군(1.25), 연기군(1.26)순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에는 공주시(1.23), 서천군(1.29), 부여군(1.30), 보령시(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도에는 공주시(1.21), 예산군(1.24), 논산시(1.33), 부여군(1.34) 순으로 나타났음

< 표 1 > 충청남도 시군별 합계 출산율

구 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충청남도	1.68	1.26	1.35	1.50	1.44
천안시	-	1.28	1.37	1.50	1.38
공주시	-	1.03	1.21	1.23	1.21
보령시	-	1.19	1.35	1.34	1.38
아산시	-	1.31	1.39	1.62	1.65
서산시	-	1.34	1.42	1.74	1.60
논산시	-	1.17	1.26	1.42	1.33
계룡시	-	1.25	1.52	1.60	1.55
금산군	-	1.26	1.34	1.57	1.54
연기군	-	1.34	1.26	1.47	1.52
부여군	-	1.23	1.31	1.30	1.34
서천군	-	1.3	1.23	1.29	1.37
청양군	-	1.36	1.46	1.56	1.60
홍성군	-	1.21	1.25	1.41	1.34
예산군	-	1.13	1.24	1.40	1.24
태안군	-	1.21	1.34	1.43	1.38
당진군	-	1.3	1.43	1.60	1.56

○ 2007년도 충남의 출생아 수가 많은 시군으로는 천안시 6,960명, 아산시 2,908명, 서산시 1,782명, 당진군 1,353명 등으로 나타나 산업시설의 증가 등 지역사회 발전 정도에 의하여 출생아 수가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음.

< 표 2 > 2007년도 시군별 출생아 수

구 분	출생아수	구 분	출생아수
천안시	6,960	연기군	831
공주시	946	부여군	472
보령시	834	서천군	365
아산시	2,908	청양군	222
서산시	1,782	홍성군	714
논산시	1,072	예산군	655
계룡시	425	태안군	477
금산군	491	당진군	1,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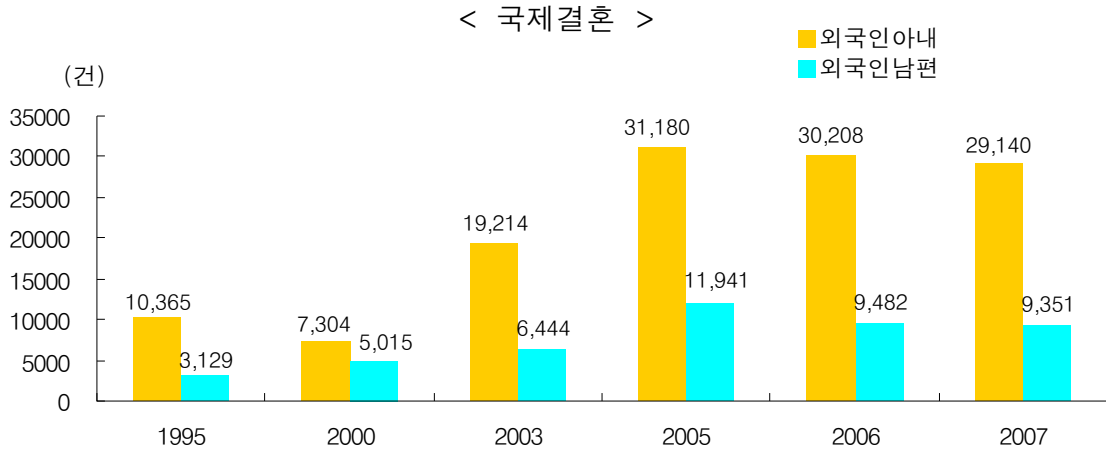
○ 충청남도의 출산율이 2005년도 1.26명에서 2006년도 1.35명, 2007년도 1.50명으로 증가한데는 일부 시군으로의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시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증가도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여겨짐(특히 2008년도 청양군 출산율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여겨짐)

< 표 3 > 충청남도 외국인 아내 국적별 혼인 건수

(단위 :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필리핀	60	30	57	65	102	95	129	152	160
베트남	1	2	41	105	201	429	604	484	575
캄보디아	---	---	---	7	6	14	35	127	45
태국	11	21	28	23	28	20	14	23	29
몽골	0	3	6	14	25	25	37	35	20
중국	152	296	290	461	596	712	569	552	609
일본	18	22	24	31	21	26	37	39	26
우즈베키스탄	2	1	16	20	13	26	15	19	20
미국	4	2	6	3	4	3	6	4	5
기타	27	32	15	23	31	28	26	32	28
합계	275	409	481	752	1,027	1,378	1,472	1,467	1,517

< 그림 1 >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추이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 충남의 저출산 요인 분석<sup>14)</sup> - 출산관련 통계를 중심으로

### 가.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 2008년도 충남 전체의 인구이동은 전입이 355,294명, 전출이 339,765명으로 15,529명이 인구이동에 의해 증가하였지만, 16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서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 수가 더 많음.

-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은 시군으로는 천안시(932명), 아산시(17,298명), 서산시(2,498명), 계룡시(3,367명), 태안군(425명)
-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은 시군으로는 공주시(-1,453명), 보령시(-793명), 논산시(-1,648명), 금산군(-852명), 연기군(-1,550명), 부여군(-912명), 서천군(-385명), 청양군(-396명), 홍성군(-425명), 예산군(-287명), 당진군(-290명) 11개 시군임

14) 본 내용은 “저출산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2005,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재우/김종철)의 통계자료 및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 표 4 > 2008년도 시군별 인구이동 현황

구 분	전 입	전 출	순 이 동
충남	355,294	339,765	15,529
천안시	106,618	105,686	932
공주시	15,854	17,307	-1,453
보령시	15,081	15,874	-793
아산시	63,608	46,310	17,298
서산시	25,756	23,258	2,498
논산시	15,749	17,397	-1,648
계룡시	14,759	11,392	3,367
금산군	6,481	7,333	-852
연기군	10,794	12,344	-1,550
부여군	6,832	7,744	-912
서천군	6,372	6,757	-385
청양군	2,837	3,233	-396
홍성군	9,360	9,785	-425
예산군	9,587	9,874	-287
태안군	7,133	6,708	425
당진군	38,473	38,763	-290

- 특히 전입인구의 경우 2008년도에 여성이 남성 보다 4,226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 남성인 경우 자녀교육 등 교육/문화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내와 자녀가 함께 전입하지 않은 경우도 그 한 요인으로 여겨짐.

< 표 5 > 2008년도 충청남도 인구이동

구 분	전 입	전 출	순이동
전체	355,294	339,765	15,529
여자	175,534	169,157	6,377
남자	179,760	170,608	9,152
남자-여자	4,226	1451	

## 나. 주된 출산 연령 여성 인구 수의 감소

- 주된 출산 연령층인 20-34세 여성 인구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에 35세 이상 여성 인구 추세는 증가 추세에 있음
- 20-24세 여성 인구수는 2000년 73,881명에서 2008년 58,410명으로 21,407 명 감소하였음

- 25-29세 여성 인구수는 2000년 72,030명에서 2008년 68,515명으로 3,515 명 감소 하였음
- 30-34세 여성 인구수는 2000년 73,030명에서 2008년 69,416명으로 3,614 명 감소 하였음
- 35-39세 여성 인구는 2000년 72,809명에서 2008년 78,928명으로 6,119 명 증가하였음
- 40-44세 여성 인구는 2000년 70,121명에서 2008년 75,114명으로 4,993 명 증가하였음

< 표 6 > 충남의 연령별 인구 변화 추이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24세	남 성	85,760	82,619	82,398	71,754	64,353
	여 성	73,881	72,097	72,790	65,517	58,410
	합 계	159,641	154,716	155,188	137,271	122,763
25~29세	남 성	85,509	76,970	75,673	79,788	81,784
	여 성	72,030	66,977	64,085	65,877	68,515
	합 계	157,539	143,947	139,758	145,665	150,299
30~34세	남 성	81,263	83,388	84,043	80,040	78,043
	여 성	73,030	73,749	74,306	72,112	69,416
	합 계	154,293	157,137	158,349	152,152	147,459
35~39세	남 성	81,062	75,689	81,650	87,536	89,989
	여 성	72,809	68,642	74,402	78,439	78,928
	합 계	153,871	144,331	156,052	165,975	168,917
40~44세	남 성	76,387	82,920	84,440	80,532	84,431
	여 성	70,121	75,887	75,879	70,640	75,114
	합 계	146,508	158,807	160,319	151,172	159,545
45~49세	남 성	56,438	64,059	73,223	83,031	87,053
	여 성	54,480	60,351	68,332	76,955	79,327
	합 계	110,918	124,410	141,555	159,986	166,380
50~54세	남 성	48,674	50,465	52,803	62,079	72,067
	여 성	47,609	49,941	52,554	60,421	68,199
	합 계	96,283	100,406	105,357	122,500	140,266
55~59세	남 성	43,720	40,731	45,257	50,190	52,110
	여 성	51,038	44,131	45,572	50,424	52,387
	합 계	94,758	84,862	90,829	100,614	104,497
60~64세	남 성	45,284	46,315	43,523	41,688	43,278
	여 성	54,686	56,819	52,941	47,713	45,792
	합 계	99,970	103,134	96,464	89,401	89,070

## 다. 혼인 건수의 감소

< 표 7 > 충청남도 연도별/시군별 혼인 건수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비교 (2008-1990)
충남	15,814	13,480	12,097	12,107	13,354	-2460
천안시	2,210	2,965	3,389	3,847	4,196	1986
공주시	1,381	973	740	691	655	-726
보령시	978	797	685	553	601	-377
아산시	1,320	1,354	1,365	1,586	2,224	974
서산시	1,241	1,107	1,019	969	974	-267
논산시	1,444	1,015	781	690	644	-800
계룡시	-	61	99	156	224	-
금산군	676	490	351	357	360	-316
연기군	839	638	497	479	520	-319
부여군	1,029	616	438	356	338	-691
서천군	710	537	379	266	265	-445
청양군	457	263	222	152	141	-316
홍성군	902	671	464	462	438	-464
예산군	1,059	724	463	467	444	-615
태안군	601	414	432	326	361	-240
당진군	967	855	773	750	969	2

○ 충남의 혼인건수는 1990년 15,814건에서 2008년 13,354건으로 2,460건이 줄었으며, 시군별로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전 시군에서 결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 특히 논산시(800 건), 공주시(726건), 부여군(691건) 등이 혼인 건수 감소 추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라. 모의 2-5년 사이의 동거기간별 출생 건수의 감소

○ 모의 동거기간별 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1-5년 기간의 출생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1년은 2000년 5,360명에서 2007년에는 4,146명으로 1,214명 줄었음

- 2년은 2000년 3,987명에서 2007년에는 2,770명으로 1,217명 줄었음
- 3년은 2000년 3,107명에서 2007년도에는 2195명으로 912명 줄었음
- 4년은 2000년 2,169명에서 2007년도에는 1,719명으로 450명 줄었음
- 5년은 2000년 2,169명에서 2007년도에는 1,223명으로 221명 줄었음

< 표 8 > 충청남도의 모의 동거기간별/연도별 출생 건수

동거기간별	2000년	2003년	2006년	2007년	비교 (2007-2000)
계	24,480	18,445	18,501	20,507	-3,973
1년 미만	4,883	3,330	4,297	4,919	36
1년	5,360	3,971	3,671	4,146	-1,214
2년	3,987	2,601	2,435	2,770	-1,217
3년	3,107	2,483	2,167	2,195	-912
4년	2,169	1,806	1,600	1,719	-450
5년	1,444	1,225	1,145	1,223	-221
6년	884	847	851	944	60
7년	718	556	600	681	-37
8년	487	395	444	449	-38
9년	363	274	308	352	-11
10-14년	805	560	604	718	-87
15-19년	141	98	100	115	-26
20년 이상	19	17	19	17	16
미상	113	282	260	259	146

- 모의 동거기간별 출생 건수가 2000년 대비 2007년도에 증가한 기간은 1년 미만, 6년, 20년 이상으로 나타남

### 마. 모의 첫째아 출산 연령의 증가

- 과거에 주된 출산 연령층이었던 20-24세의 첫째아 출산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에 30세 이상 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 20-24세의 경우 1990년도에 4,399명 에서 2007년도에는 1,627명으로 2,772명이 감소하였음
- 30-34세의 경우 1990년도에 695명 에서 2007년도에는 2,549 명으로 1,854명이 증가하였음
- 35-39세의 경우 1990년도에 129명 에서 2007년도에는 523 명으로 394명이 증가하였음
- 40-44세의 경우도 경우 1990년도에 21명 에서 2007년도에는 87명으로 66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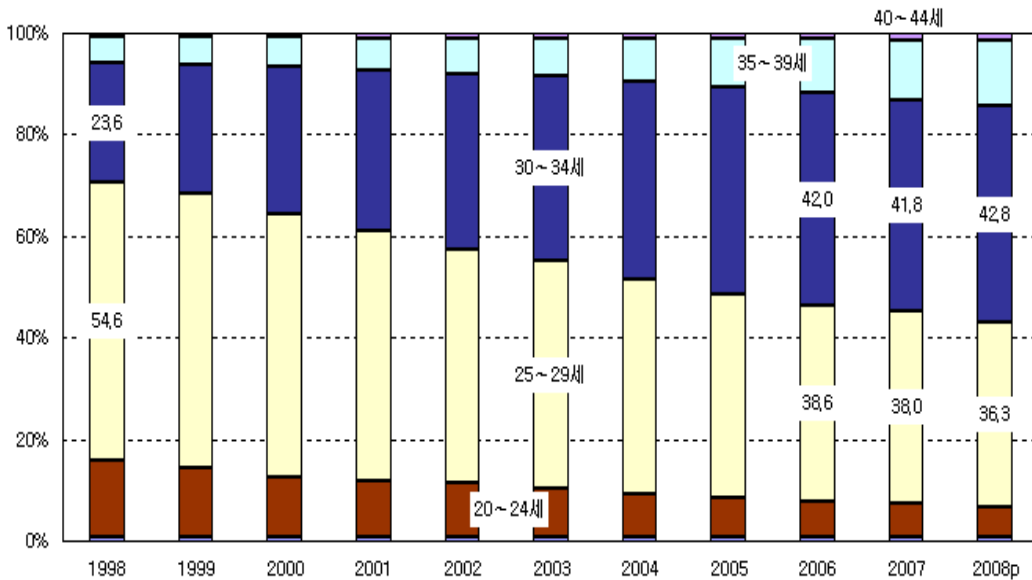
증가하였음

< 표 9 > 충청남도의 모의 연령별 첫째아 출산 건 수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비교 (2007-2000)
계	9,994	10,540	11,009	8,424	10,360	-6490
15세 미만	0	0	0	0	0	0
15-19세	525	446	328	149	167	-161
20-24세	4,399	4,186	2,923	1,588	1,627	-1,296
25-29세	4,205	4,722	5,980	4,348	5,389	-591
30-34세	695	891	1,426	1,871	2,549	1,123
35-39세	129	232	284	375	523	239
40-44세	21	42	52	67	87	35
45-49세	4	2	4	5	4	0
50세 이상	4	1	0	1	0	0
연령미상	12	18	12	20	14	2

○ 충남의 모의 20대 연령층의 출산 감소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모의 연령별 출산 경향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됨

< 그림 2 > 우리나라 모(母)의 연령별 출생 구성비 추이





## 바. 미혼 여성 1인 가구 수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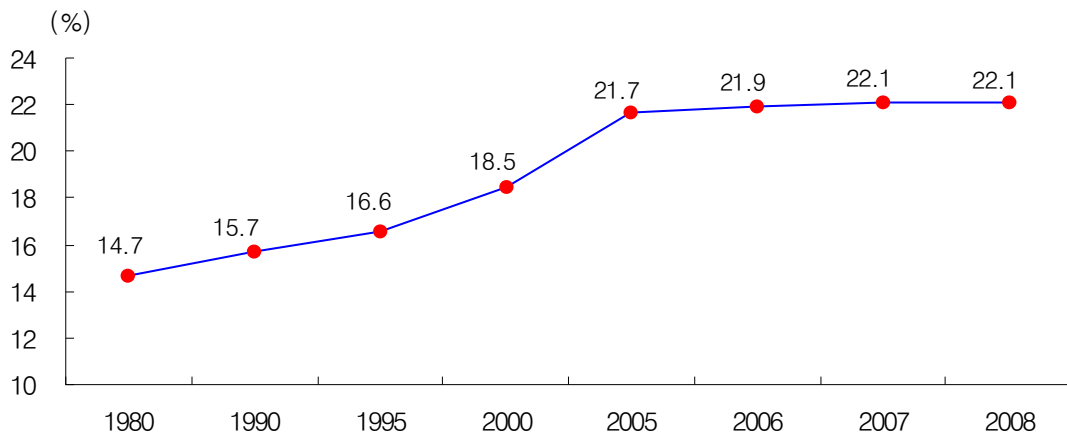
- 미혼 여성 1인 가구 수가 1995년 6,662명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12,066명으로 2배가 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20,510명으로 1995년도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 하였음
-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 인구의 증가는 남성 미혼 1인 가구 수의 증가를 초래하게 됨
- 특히 미혼 여성 1인 가구의 연령대가 출산 가능 연령인 20-44 세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혼 여성 1인 가구의 증가는 자연적으로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주게 됨
- 여성의 미혼/비혼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치관 변화 및 가부장적인 사회/가족 구조와도 연계되어 있다고 여겨짐

< 표 10 > 충청남도 미혼 여성 1인 가구 수

	1995년	2000년	2005년	비고 (2005-1995)
여 성	6,662	12,066	20,510	13,848
남 성	10,784	20,358	34,319	23,535

< 그림 3 >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 변화 추이

< 여성가구주 비율 추이 >



## 사. 지속적인 이혼 건수

- 충남의 이혼 건수는 1990년 1,333건 이후 2003년 5,720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4년에는 5,148건, 2005년도에는 4,594건으로 조금씩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4,64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가 2007년에는 4,329건으로 약간 감소했고, 2008년에는 4,472건으로 다시 약간 증가하였음

< 표 11 > 충청남도의 이혼 건수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333	2,035	4,272	4,685	5,074	5,720	5,148	4,594	4,647	4,329	4,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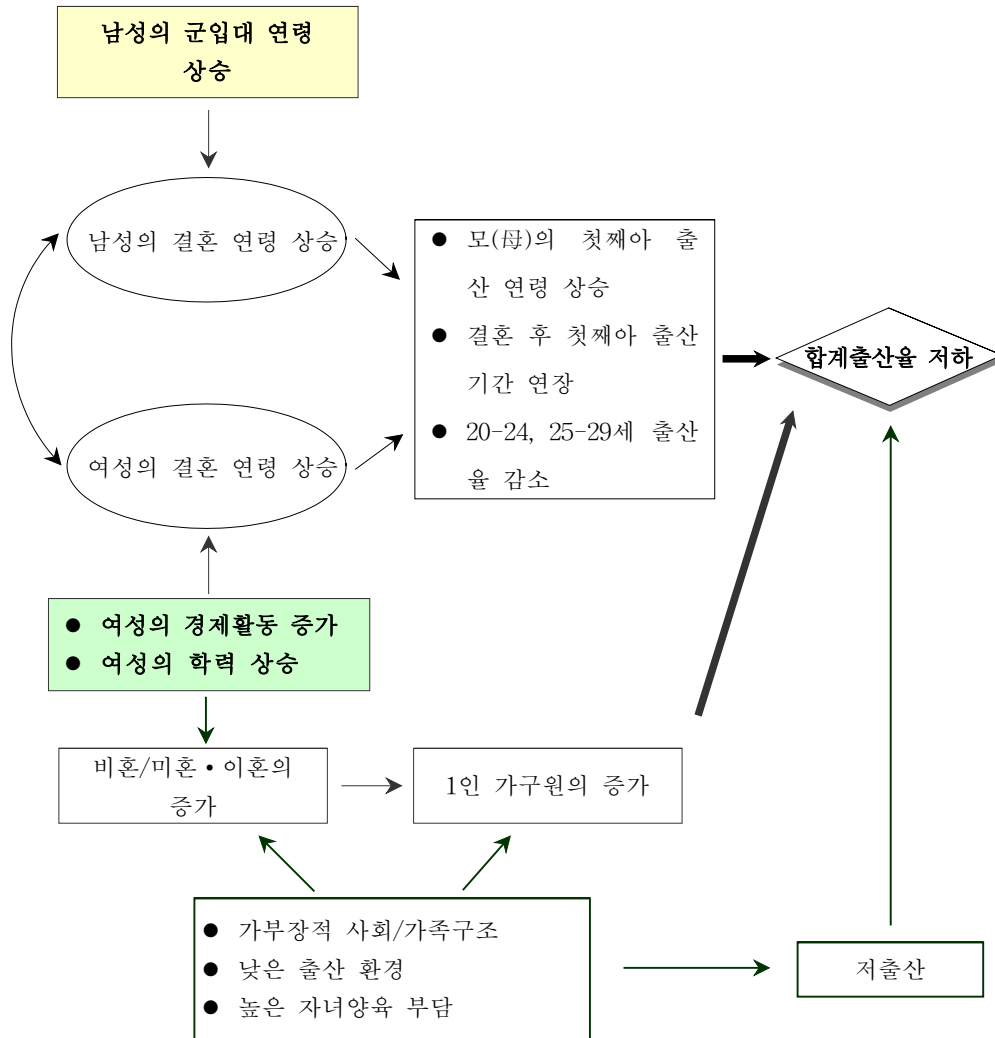
## 아. 여성의 학력 상승

-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충청남도의 경우도 여성의 학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표 12 > 충청남도 여성의 학력 분포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비교
미취학	17.3	16.0	15.6	16.2	-8
초졸이하	37.4	33.5	29.1	26.0	-11.4
중졸	18.4	16.6	13.7	11.9	-6.5
고졸	23.0	26.5	29.0	30.6	7.6
대졸이상	4.0	7.4	12.6	15.5	11.5

< 그림 4 > 저 출산 요인 체계도



### 3. 충남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 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충남 운동본부의 출범

- 충청남도는 2009년 7월 31일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충남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협약 체결 및 행동 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선언하였음
- 충남 아이낳기 운동 본부에는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출산양육후원단체, 교육계, 보건의료계, 연구기관, 농민계, 언론계,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음

< 표 13 > 충남 아이낳기 운동본부 구성

구 분	소 속
종교계	천안기독교연합회
	천주교 대전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마곡사
	원불교 대전충남 교구
경제계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하나은행 충남지역본부
	기업인연합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삼성전자 아산공장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당진상공회의소
	서산상공회의소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여성계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천안YWCA
출산양육 후원단체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남도 보육시설연합회
	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
교육계	충청남도교육청
	공주대학교
	충청남도 학원연합회
보건의료계	대한간호협회 충남간호사회
	대한약사회 충남지부
	충청남도영양사협회
연구기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농민계	전국농민충남도연맹
언론계	KBS대전
	TJB대전방송
	CBS대전방송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의 회	도의회

-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충남 운동본부 출범에 따른 협약 및 행동선언에는 충남 기업인연합회, 충청남도, 여성계, 의료계, 농업경제계 등이 참여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표 14 >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충남 운동본부 출범에 따른 협약 및 행동선언

구분	주요 내용
충남기업인연합회와 충청남도의 협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족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결혼 및 출산·양육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보급</li> <li>2. 출산 전·후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li> <li>3. 건강한 아이 출산·양육과 인재육성을 적극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직장문화의 조성</li> <li>4. 자녀양육을 즐거움과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li> </ol>
여성계의 행동선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혼남녀들의 적령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사회 실천 운동의 전개</li> <li>2.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여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캠페인 실시</li> <li>3. 남녀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li> <li>4.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전개</li> </ol>
의료계의 행동선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장여성, 결혼이주여성, 대학생 등 가임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임신·출산 교육과 출산장려를 위한 고품질 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li> <li>2.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위하여 산부인과 등 전문가와 온라인 및 전화상담의 확대</li> <li>3. 불임예방을 위한 조기진단과 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li> <li>4. 출산장려를 위한 임산부의 효율적인 건강정보관리 체계의 구축</li> </ol>
농업경제계의 행동선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장내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우수한 여성인력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함</li> <li>2.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위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보직으로 배려하는 출산양육 친화 직장 조성</li> <li>3. 농촌 여성의 출산·양육을 적극 권장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li> <li>4. 다출산·다문화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li> </ol>

## 나. 충남의 기업체의 가족친화 기업경영 운영 실태 및 도입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 (1) 충남의 기업체의 가족친화 기업경영 운영 실태

- 충남 16개 시군의 산업단지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충남의 가족친화 기업경영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김종철, 충남가족친화 기업경영 실태 조사 및 확충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8)에 의하면 가족친화기업경영제도 시행율이 20% 이상인 가족친화기업경영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휴가제(60.8%), 육아휴직 이후의 복귀제도(39.4%), 육아휴직제(35.2%), 아버지 출산휴가제(31.9%), 출산휴가비 및 장려금 지급(31.5%), 근로자의 상담 및 교육실시(26.4%), 취학아동을 위한 학자금 지원(20.5%), 산업단지 내 혹은 주변에 슈퍼, 의료시설, 은행 등 생활 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 (20.3%) 등으로 나타났음

< 표 15 > 시행율이 20% 이상인 가족친화기업경영제도 제도

구분	20% 이상 시행중인 가족친화기업경영제도 내용
출산·양육·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출산휴가제(60.8%)
	육아휴직 이후의 복귀제도(39.4%)
	육아휴직제(35.2%)
	아버지 출산휴가제(31.9%)
	출산휴가비 및 장려금 지급(31.5%)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근로자의 상담 및 교육실시(26.4%)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보육 및 교육지원제도	취학아동을 위한 학자금 지원(20.5%)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환경 구성	산업단지 내 혹은 주변에 슈퍼, 의료시설, 은행 등 생활 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 (20.3%)

- 가족친화기업경영제도 시행율이 10% 미만인 가족친화기업경영제도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특히 가족친화기업경영의 핵심 축에 해당되는 탄력근무제도의 경우 모든 제도의 시행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탄력근무제 도입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으로 여겨짐

< 표 16 > 시행율이 10% 미만인 가족친화기업경제도 제도

구분	
탄력근무제도	1) 원격 근무(9.3%)
	2) 재택 근무(5.4%)
	3) 시차출퇴근(6.7%)
	4) 시간제 근무(8.1%)
	5) V시간(4.0%)
	6) 자율근무(6.8%)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보육 및 교육지원제도	1) 산모를 위한 휴게실 설치 및 운영 (9.6%)
	2) 산모를 위한 수유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8.2%)
	3)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8.2%)
	4) 탁아비 지원 (6.9%)
	5) 방과후 보육비 지원 (5.6%)
	6) 방과후 교육비 지원 (5.6%)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1) 가족간호 휴가제 (4.2%)
	2) 근로자 간병비 지원 (6.8%)
	3) 가족 간병비 지원 (4.2%)
	4) 노인 부양비 지원 (2.8%)
	5) 근로자 가족의 상담 및 교육실시 (5.5%)
	6) 가족대상 평생교육 및 자기개발 학습비 지원 (4.2%)
취약계층 가족지원제도	1) 한부모 가족(5.7%)
	2) 조손가족(5.7%)
	3) 국제결혼 가족(4.3%)
	4) 노인 부양 가족(5.7%)
	5) 장애인 가족(5.7%)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환경 구성	1)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4.3%)
	2)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9%)
	6)산업단지 내 우수 가족친화 기업 선정 및 포상(6.0%)

## (2) 가족친화 기업경영 도입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 직무몰입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예상되는 가족친화 제도에는 시간제근무(33.3%), 근로자 평생교육 및 자기개발 학습비 지원(30.1%), 가족대상 평생교육 및 자기개발 학습비 지원(25.4%), V 시간(24.3%),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22.0%), 시차출퇴근(21.4%) 등으로 나타났음

< 표 17 > 직무몰입 및 생산성 향상에 효과가 큰 가족친화 제도

구분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율이 20% 이상 나온 제도
탄력근무제도	시차출퇴근(21.4%)
	시간제근무(33.3%)
	V 시간(24.3%)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근로자 평생교육 및 자기개발 학습비 지원(30.1%)
	가족대상 평생교육 및 자기개발 학습비 지원(25.4%)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환경 구성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22.0%)

- 직장생활 만족도 증가 효과가 예상되는 가족친화 제도에는 가족간호휴가제(72.3%), 탁아비 지원(71.4%), 유치원비 지원(69.4%), 취학전 자녀의 보육비 지원(69.4%), 출산 휴가비 혹은 장려금 지급(68.1%),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제(67.4%), 근로자간병비지원(66.7%), 취학아동을 위한 학자금 지원(66.7%), 아버지 육아휴직제(65.3%), 유산·사산 휴가제(65.2%) 등으로 나타남

< 표 18 > 직장생활 만족도 증가에 효과가 큰 가족친화 제도

구분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율이 65% 이상 나온 제도
출산·양육·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출산 휴가비 혹은 장려금 지급(68.1%)
	아버지 육아휴직제(65.3%)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제(67.4%)
	유산·사산 휴가제(65.2%)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가족간호휴가제(72.3%)
	근로자간병비지원(66.7%)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취학전 자녀의 보육비 지원(69.4%)



구분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율이 65% 이상 나온 제도
보육 및 교육지원제도	유치원비 지원(69.4%)
	탁아비 지원(71.4%)
	취학아동을 위한 학자금 지원(66.7%)

- 이직을 감소 효과가 예상되는 가족친화 제도에는 육아휴직이후의 원직복귀제도(27.8%), 복직보장 무급 휴가제(25.0%), 출산휴가제(25.0%), 재택근무(23.8%), 육아휴직제(23.1%), 육아휴직 급여 지급(22.9%)원격근무(20.9%), 노인 부양가족 지원(20.0%) 등으로 나타났음

< 표 19 > 이직을 감소에 효과가 큰 가족친화 제도

구분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율이 20% 이상 나온 제도
탄력근무제도	원격근무(20.9%)
	재택근무(23.8%)
출산·양육·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출산휴가제(25.0%)
	육아휴직제(23.1%)
	육아휴직 급여 지급(22.9%)
	육아휴직이후의 원직복귀제도(27.8%)
	복직보장 무급 휴가제(25.0%)
취약계층 가족지원제도	노인 부양가족 지원(20.0%)

- 기업 이미지 향상 효과가 예상되는 가족친화 제도에는 산업단지 내 우수 가족친화 기업선정 및 포상(42.1%),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가족들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32.5%), 근로자 가족의 상담 및 교육 실시(27.1%), 산업단지 주변의 공원, 보육, 교육, 주택 등 공공 복지 시설의 설치 및 확충(25.0%), 가족간호 휴가제(23.9%), 산업단지 내 혹은 주변에 슈퍼, 의료시설, 은행 등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22.0%), 국제결혼 가정 지원(23.8%), 노인 부양비 지원(21.3%),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운영(20.4%), 노인부양 가족 지원(20.0%), 장애인 가족 지원(20.0%),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0.0%) 등으로 나타났음

< 표 20 > 기업 이미지 향상에 효과가 큰 가족친화 제도

구분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율이 20% 이상 나온 제도
출산·양육·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가족간호 휴가제(23.9%)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노인 부양비 지원(21.3%)
	근로자 가족의 상담 및 교육 실시(27.1%)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보육 및 교육지원제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운영(20.4%)
취약계층 가족지원제도	국제결혼 가정 지원(23.8%)
	노인부양 가족 지원(20.0%)
	장애인 가족 지원(20.0%)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환경 구성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0.0%)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가족들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32.5%)
	산업단지 내 혹은 주변에 슈퍼, 의료시설, 은행 등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22.0%)
	산업단지 주변의 공원, 보육, 교육, 주택 등 공공 복지시설의 설치 및 확충(25.0%)
	산업단지 내 우수 가족친화 기업선정 및 포상(42.1%)

#### 다. 충남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과제 및 정책 제안

- 앞에서의 논의와 필자의 저출산 관련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충남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현재까지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 않았거나, 연구는 되었지만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대안을 중심으로 하되 실현 가능하고 효과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표 21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과제 및 정책제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과제	정책제안	비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미혼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젠더 파트너십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결혼 준비/예비 교실 운영	
	결혼 자격 인증제 시범 운영 : 젠더(양성평등) 관점 확립, 부부관계, 가족관계, 일가정 양립 가치관 및 실천력 제고, 자녀 양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이수자에 대한 면접 후 인증제 발급)	국가적 차원 검토
	가족 구성원 간 가사 및 자녀 양육 함께 하기 사진, 그림, 글짓기 콘테스트(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생 대상)	
	입양 가족대회 및 사진 콘테스트 개최	
	다자녀 가족 활동 체험 글 모음 및 사진 콘테스트	
	충남 아이사랑 가족행복 캠페인 로고 제작 및 광고 홍보	
	결혼가치관 정립 및 결혼 촉진/지원을 위한 추진단 구성·운영	국가적 차원 검토
	결혼을 위한 젠더 관점, 일가정 양립, 정립 및	
결혼/임신/출산 축하 지원	25세 이하 출산자 특별 출산 장려금 지급	국가적 차원 검토
	남녀 28세 이하 결혼자 축하금 지원	국가적 차원 검토
	임신 7개월 이후 태아/영유아 건강 보험금 지원	국가적 차원 검토
	출산 후 육아 준비용품 제공: 체온계, 체중계, 키 재기, 철분제, 기저귀, 출산 정보 이용 안내 사이트 안내 책자 제공	
	남녀 20대 출산 시 취업 가산점 부여(공공 부문에서 사적 부문으로 확대)	국가적 차원 검토
	20대 2자녀, 30대 3자녀 출산자 취업 시 특별 가산점 부여(공공 부문에서 사적 부문으로 확대)	국가적 차원 검토
	문예회관 등 공공시설의 결혼식장 무료 대여	
	남성 20대 2자녀 출산 시 군복무 대체제 도입	국가적 차원 검토
자녀 양육/교육 지원	2자녀 이상 가정의 영재아동 조기 진단 센터 설립 운영 및 영재아 지원 프로젝트 운영	국가적 차원 검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과제	정책제안	비고
*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임	20대 2자녀, 30대 3자녀 가정에 대한 가정 양육비 지원	국가적 차원 검토
	산모 도우미 및 영아 돌보미 보험 지원	
	워킹맘의 영아 돌봄 보육 시설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워킹맘 범주에 여성 농업임 포함)	국가적 차원 검토
	워킹맘 보육시설 인증제 도입 및 준 직장 보육시설 개념제 도입(현재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인 상시 500인, 여성 300인의 기준외에 워킹맘 보육 아동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국가적 차원 검토
	저소득 가정 신생아(만 2세까지) 모친 Food Stamp 제공	
	낙후 지역 산후 조리원 운영비 지원	
	낙후 지역 산모를 위한 출산자 이용 응급차량 지원 - 낙후 지역과 거점 병원과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낙후 지역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파견 지원	
	만 2세 이하 영아 가정 돌보미 사업 추진 체계 구축	국가적 차원 검토
	한부모 출산/양육자에 대한 지원 시설 확충	
	한부모 출산/양육자의 육아, 학업, 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적 차원 검토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여성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출산/육아교실 운영 :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활용)	
일 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제도 이용 안내 홍보 책자 발간 보급	
	남녀(특히 남성)를 위한 젠더 학교, 프로그램 운영(아버지 학교, 남편 교실 명칭 변경 요망)	
	직장 여성을 위한 권역별 시간 연장/휴일 보육/단기생활보육 우수 기관 인증 및 특별 운영비 지원	
	남성 출산 휴가제 의무화 및 남녀 가족 간호 휴가제 도입	국가적 차원 검토
	아버지 육아휴직제 도입 및 의무 사용 기간 설정 ( 10-30일)	국가적 차원 검토
	탄력시간 근무제 도입 기업체/ 공공기관 선정 및 시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과제	정책제안	비고
	산업단지 지역 EAP 지원센터 설치 운영(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 종업원, 가족 대상 상담 및 정보 제공 )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친화 기관/기업 선정 및 포상	
인구 전입 및 지역 활성화	가족 단위 및 20-30대 기혼 여성 전입 신고 시 문화상품권(영화관람권 등) 및 충남 안내책자 제공	
	가족친화 환경 우수 마을 공모 및 포상	
	충남의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출산/결혼/양육 지원 방안 공모 및 지원 - 신 산업도시(천안시, 아산시, 당진군, 서산시), 신도시(연기군, 홍성군, 예산군), 문화관광 지역(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태안군, 계룡시), 농어촌 지역(금산군, 논산시, 청양군, 서천군)	
	영화관 미 설치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영화관 설립 및 운영비 지원(문예회관의 야간, 주말의 영화 상영장으로 전환 검토)	
저출산 극복 추진 체계 및 역량 구축	저출산 전담 및 TFT 구성 운영 : 충남도에 저출산대책팀이 설치되어 운영 중임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보건소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및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출산/양육 지원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및 확대	
	지역별 저출산 지원 거점 센터 설립 및 연계 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보건소,보육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정지원센터,병원,산후조리원,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 소속 기관 등)	

## < 참 고 문 헌 >

- 김종철(2008), 충남가족친화 기업경영 실태조사 및 확충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김종철(2003),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 안정정책,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김진수·석재은(2005),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 한국  
사회복지정책학회
- 관계부처 합동(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2006-2010」.
- 보건복지부(2007),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 이재우·김종철(2005), 저출산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I, II, III, IV」.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7), 「중앙부처 시행계획」.
-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6), 세미나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안 모색」
-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6), 「충남여성통계」.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